

아침햇발

성한표 논설주간



96.7.10

마을 청년들에 의한 11살 소녀가장 집단 성폭행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집승 같은 패륜아들에 의한 범죄'라는 표현만으로는 모자란다. 마을 전체가 이 범죄의 방조자요, 가담자였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 사회 전체가 우범자임을 말해준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사회를 지탱해 나갈 최소한의 도덕적 기반과 공동체 의식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이 사회에 대한 준엄한 사형선고이다.

소녀가장 절망케 한 패륜적 사회

'11세 소녀가장'이라는 신본은 피해자가 우리 사회에서 약자 중에서도 약자임을 상징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장치는커녕 이들이 바로 그 약자라는 이유 때문에 무시로 잔인한 폭력의 희생물이 되어야 한다면 그곳에 이미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학교장이 여중생을 '성추행'했다는 고발이나 자취하는 여중생을 70대의 주인과 그의 30대 아들이 성폭행했다는 고발 등은 해체되는 공동체의 조그만 증상들일 뿐이다.

우리 사회에는 보호받아야 할 약자들이 많

굴을 내민 적은 거의 없다. '소녀가장'들은 정부와 사회의 관심권 밖에 방치되고 있다. 소녀가장을 절망케 한 마을 청년들 스스로가 중층적 폭력에 의해 인격이 망가진 또 하나의 약자들일지도 모른다. 비인간적 작업환경과 노동조건에 대한 노동자들의 문제제기, 이로 인한 노동쟁의에서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그것해야 중립을 취하거나, 아니면 문제의 작업 중지권에 대해서와 같이 기업주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심지어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버릴 수 있는 온갖 그물을 쳐놓고, 여기에 걸려들면 경찰력의 무자비한 투입과 무더기 구속으로 항상 강자편에 서왔던 것이 정부의 참모습이었다. 이번 해고자 복직과 관련해 경영쪽이 정부에 대해 노골적으로 드러낸 '배신감'에는 이런 배경이 버티고 있다.

사회적 약자는 법과 제도로 보호해야 하고, 이들에 가해진 폭력은 엄하게 응징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절제되지 않은 폭력의 가장 집요한 사례는 80년 5월의 광주민주화살이다.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유혈 참극의 주동자로서 전두환·노태우 두

짓밟힌 약자의 반란

이 있다. 1년여 전 삼풍백화점이 어이 없이 무너져내렸을 때 사망하거나 다친 1천4백38명 중 백화점 또는 입주업체 종업원이 무려 5백60명이었다. 그들은 천장과 바닥이 갈라지는 위기 순간에도 기업주의 영업계속 지시에 놀려 법에 의해 보장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조차 행사해보지 못한 약자들이었다. 저장탱크를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가스에 질식사해 목숨을 잃는 동료를 보면서 다시 탱크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노동자의 신세다. 이런 약자들의 희생 행렬은 오늘날 여러 산업현장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를 비롯한 10여개 사업장에서 노사간에 작업중지권에 대한 협약을 맺은 것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온 사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바람직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사회의 강자들이 보인 반응은 어떤 것이었던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작업중지권은 사업주의 고유권한'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며 반발을 보이자 언론들이 이를 대대적으로 증폭시키는 등 한바탕 소란이 일었던 것은 우리 모두 아는 바와 같다. 어디 그뿐인가. 공공부문 노사분쟁 타결에서 해고자 복직이 일부 받아들여지자 경총은 이것도 문제삼았고, 이를 충실히 전하는 언론에 고무받은 반발세력들은 청와대 안의 특징인을 겨냥한 음해성 비방도 서슴지 않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 가해지는 반인륜적 또는 제도적 조직적 폭력의 현장에 정부가 일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운 이 재판은 우리 사회가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고비가 되고 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온갖 걸림돌들은 우리가 '성공한 쿠데타'의 처벌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우려를 갖기에 충분하다. 변호인들은 온갖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재판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전·노씨 인권'의 강조, 절차적 정당성 시비 또는 무원칙한 관용주의 논리도 동원되고 있다. 심지어 전·노씨를 나폴레옹에 비유하면서 미화하는 변호인도 등장했다. 변호인들의 궤변이 당장은 온 국민의 빈축을 산다고 해도, 언론의 태도에 따라서는 조금씩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가치판단의 근거를 파먹어들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반폭력 사회 향한 고비

법정에 선 두 전직 대통령쪽의 끈질기고 조직적인 저항, 시대 변화에도 이렇듯하지 않는 기업주 단체들의 완고한 반 노조적 태도, 일간이기를 포기한 반인륜적 범죄의 만연 등은 우리 사회가 지금 벼랑에서 있다는 현실을 일깨워준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진정한 힘도 자라고 있다. 법의 온갖 제망을 뚫고 강력하고 자율적인 조직을 만들고 노동자들의 의지, 역사에 맡기려던 '성공한 쿠데타'를 끝내 법정에 세운 과거청산의 국민적 열기 등을 정부가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짓밟히던 약자들의 대반란이 시작된 것이다.